

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·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2.25.(수) 동아일보, “쫓개기 교섭’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...춘투대란 현실화 우려”
중앙일보, “노사 모두 “말이 되냐”...‘대화 강조’ 노란봉투법 불안한 출발”
전자신문, “노란봉투법 내달 10일 시행 모호한 규정 탓 혼선 불가피” 등

-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십, 수백개의 하청을 둔 원청 기업이 계속되는 노사 분류와 파업 리스크에 시달릴 경우 손해를 다투는 국가 간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만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- 수백 개의 하청노조가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‘무한 쫓개기 교섭’을 요구할 수 있고 (중략) 하청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다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. 사실상 개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.
- 당장 경영계는 “교섭단위 분리가 지나치게 쉬워져 수백개 하청업체와 개별 교섭을 해야 할 수 있다”며 걱정이 크다. (중략) 민주노총은 이날 “이번 시행령은 원·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더 제약한다”며 (후략)
- 하청노조 별도 교섭 사실상 허용 (중략)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은 “교섭 단위 분리 요건이 과도하게 확장돼 원청노조끼리도 분리가 가능해질 것 같다”며 “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흔들릴 것”이라고 걱정했다.
- 그러나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, (중략) 이 과정에서 해석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.

2. 설명 내용

<교섭단위가 수백 개 등으로 과도하게 분리된다는 주장 관련>

-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 규정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진다고거나, 교섭단위가 과도하게 분리되어 사실상 개별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
 - 개정법에 따라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
 - 개정 시행령은 현행법상 교섭단위 분리 규정에 따라 기존에 법원 판결,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한 것이며,
 - 원·하청 교섭에서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, 어느 특정 요소가 조금이라도 해당하기만 하면 교섭단위가 무조건 분리되는 것이 아님
 - 당초 입법예고안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규정한 것이었으나,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노·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취지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이며,
 -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졸속이라거나 땀질식 보완에 그쳐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

<개정 시행령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약한다는 주장 관련>

-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현행법에 따라 안정적인 교섭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원·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방안임
 -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기 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으며,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

-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원·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
- 아울러, 개정 시행령은 원·하청 교섭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음

<시행령, 지침의 내용이 모호하여 혼란이 초래된다는 주장 관련>

-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은 그간 교섭단위 분리 및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,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한 기준과 사례들을 구체화한 것으로,
 - 전문가 및 노·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현장 적합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한 것임
- 앞으로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행 준비 기간 동안에도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며,
 -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원·하청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함으로써 개정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서명석 (044-202-7611)
		담 당	서기관	유현경 (044-202-7609)
			서기관	정장석 (044-202-7615)